

▶ 7대 의혹사건 발표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발표문

I 概 要

1. 조사 목적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에 따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 그 동안 이 사건들은 5.16 쿠데타 주동자들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되어 왔고
 - 특히 이러한 정치공작에 중앙정보부가 앞장서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아 오며 따라 이에 대한 진실을 엄정히 밝히고자 한 것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온 사실을 바로잡음은 물론, 나아가 밝혀진 진실에 합당한 사후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진실위」는 지난날 야기된 비슷한 유형의 권력남용과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기틀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2. 사건 개요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62년 김지태(金智泰)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 소유의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0,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 토록 한 사건으로
- 박정희 정권은 '기부' 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언론장악을 기도해 온 박정희 정권이 65년에서 66년에 걸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은행대출금 회수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공매 처분한 사건임

Ⅱ 調査 内容

1. 핵심 의혹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재산헌납 과정의 강제성 여부와 구속 과정의 적법·타당성 여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및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전 경위 등이며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경향신문의 강제매각 추진 배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 구속 과정의 적법·타당성 여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회수 압력 행사 여부 등이 핵심 의혹임

2. 자료 및 면담 조사

사 건 별	조 사 현 황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부일장학회 등 사건	계 : 646건 8,800여쪽 ○ 일반자료 : 165건 5,900여쪽 ○ 국정원 보유자료 : 94건 1,147쪽 ○ 타기관 보유자료 : 342건 1,262쪽 ○ 유족측 제공자료 : 35건 400쪽 ○ 부산일보 · 정수장학회 제공자료 : 9건 48쪽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 1건 23쪽	계 : 18명 ○ 김지태 유족 : 6명 ○ 전 중앙정보부 직원 : 7명 ○ 5.16장학회 및 정수장학회 관계자 : 2명 ○ 기타 인사 : 3명
경향신문 사건	계 : 300건 28,500여쪽 ○ 일반자료 : 210건 16,547여쪽 ○ 국정원 보유자료 : 82건 1,901쪽 ○ 타기관 보유자료 : 8건 10,050쪽	계 : 28명 ○ 경향신문사측 인사 : 7명 ○ 전 중앙정보부 직원 : 18명 ○ 기타 인사 : 3명

Ⅲ 調査 結果

1.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 · 한국문화방송 · 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 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4년간 총 12,364명에게 17억 7,03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을 벌였으며

-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

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 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재구속 되어 재산을 내놓게 된 경우는 김지태가 유일함
- 김지태 수사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자신의 진술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를 번복)
 -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김지태의 비위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박○○ 지부장이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정치인 실태보고서'에서는 김지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어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나. 김지태의 혐의와 구속

-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윤우동 등 임직원 10여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월 초순에는 그의 처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黃龍珠)의 권유에 따라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를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군검찰은 5월 24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

- 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날인 62년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申植秀)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 6월 20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원증(高元增)이 작성해 온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 고원증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음
- 한편 김지태는 처음부터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명목의 토지를 자진 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석방 이후 62년 7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 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 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 기부승낙서 위·변조 의혹

- 김지태가 62년 6월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기부날짜가 원래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지태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필적 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여부를 감정한 결과
- 기부승낙서는 김지태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서명을 하였고 기부승낙서 상의 날짜도 한자 '六月 二十日'에 한 획을 가필하여 '三十'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 이는 김지태가 6월 22일 석방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이라면 김지태가 아직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고, 6월 30일이라면 석방된 다음 기부한 것이 되어 재산헌납의 자발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됨

라. '강제 헌납' 재산

- 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헌납' 한 재산은 총 85,270,279원임
 - 주식 : 총 53,100주(평가액 34,876,096원)
 - 부산일보 : 100%(2만주, 평가액 19,285,649원)
 - 한국문화방송 : 100%(2만주, 평가액 10,446,342원)
 - 부산문화방송 : 65.5%(13,100주, 평가액 5,144,105원)
 - 부동산 :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0,147평(평가액 50,394,183원)
- 헌납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100,147평(253필지)은 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으나, 5.16장학회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63년 7월 25일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며
- 국방부는 63년 10월 21일 김지태에게 62년 4월 11일 부일장학회 이사진 결의로 정부에 토지(도로부지로 편입된 6필지를 제외한 99,451평)를 기부출원한데 대해 감사공문을 보냈음

마. 언론 관련 재산 헌납 경위

- 김지태가 구속된 뒤 석방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박정희 의장의 대구 사범 동기이며 부산일보 주필인 황○○였음
- 황용주는 수감중이던 김지태에게 “생사업체는 해야 할 것이고, 부일장학회는 재산 내놓고 이사장 맡으면 공익사업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생사 부문은 살아야 되고 언론부문은 내놔야 안되겠냐”라며 언론 관련 재산 포기를 종용
- * 前 부산문화방송 사장 김종한은 “문화방송을 넘겨주자고 한 건 황용주 장난”이라며 “주연은 박 대통령 이고, 조연은 황용주와 국제신보 사장 둘이 맡았다”고 주장

- 이에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행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다 강제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됨

바. 재산 헌납과 5.16장학회의 설립

-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로부터 헌납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평가액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양도
- 박정희 의장은 “기부 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에게 5.16장학회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이후 장학회의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 등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사.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신직수·고원증 등)들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 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

2.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가. 박정희 정권과 언론

- 64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정국의 혼란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때문이라며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마련하여 언론계와 마찰을 초래하였음
- 정부는 8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끝까지 반대하는 4개사에 대하여 정부광고 중단, 신문용지 배급과 은행 융자의 제한, 출입기자의 관청출입 금지, 언론인 사생활 정보수집은 물론 나아가 정간 또는 폐간 조치 등을 취하기로 의결하였음
- 64년 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끝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표면상 언론계 승리로 끝났으나, 그후 박정희 정권은 더욱 효과적인 언론대책을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 1965년 경향신문 사건이 야기된 것으로 보임

나. 경향신문 탄압의 배경

- 당시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왜 경향신문이 정권의 언론공작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 1) 경향신문의 논조
 - 경향신문은 자유당 시절 독재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폐간된 전력이 있는 신문으로 한일회담과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를 주도하고, ‘허기진 군상’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 63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연루 자료를 보유하여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활용할 수 있었던 데다, 황태성 간첩 사건 보도 등을 통해 박 후보의 사상문제를 부각시켰음

2) 박 대통령의 경향신문 인수 추진

- 박정희 의장은 천주교유지재단이 62년 경향신문의 매각을 추진하자 자신과 친분이 돈독한 시인 구상(具常)을 내세워 경향신문 인수를 추진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 천주교측은 자금원이 박 의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금 3억환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음¹⁾

다. 사건의 경과

1) 필화 사건

- 경향신문은 64년 2월 1일 삼분폭리(三粉暴利)의 내막을 파헤쳐 정치쟁점화 시킨데 이어, 64년 5월 9일 '허기진 군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이와 같은 비판은 경향신문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음
- 64년 5월 12일 '정일권 내각에 바란다' 기사에서 "지금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200만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문제가 되어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음
- 이어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격화되어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당국은 '허기진 군상' 시리즈 등의 폭로기사와 르포기사가 북의 신문·방송에 인용됨에 따라, 북측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 3명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음
- 한편, 박 정권은 사장 이준구를 구속했다가 풀어줌으로써 신문의 논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경향신문의 비판적인 논조는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신문

1)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시점인 62년은 중앙정보부가 김지태를 구속하고 언론 3사의 헌납을 강요하던 시기이 같은 일이 발생한 시점인 62년은 중앙정보부가 김지태를 구속하고 언론 3사의 헌납을 강요하던 시기

발행인협회 회장이었던 이준구는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도록 함

- 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됨
-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李馨白)이 연루된 무전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尹祐鉉)이 월북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 5월 8일에는 사장 이준구와 그의 처남인 업무부국장 홍화수(洪化洙) 등을 이 사건과 연관시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함

2) 윤우현 간첩사건

- 윤우현은 동경 소재 마루우치상사(丸內商社) 사장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는데
-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자신의 고종사촌 정○○ 등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간첩 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다가 입북하였다고 발표함
-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음

3) 이형백 간첩사건

-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언론기관을 배후조종하라는 지시를 받고 납파된 북한 간첩 이문백(李文白)에 의해 포섭되어 활동한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등 ‘無電間諜’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
- 이문백은 이형백의 친동생으로 58년 5월 납파된 뒤 이형백과 접선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8년 6월 15일 북으로 복귀했고, 60년 8월 다시 납파되어 국내정보 등을 수집 후 64년 9월 북으로 복귀

-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이 이준구를 포섭대상으로 삼고 농촌의 참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발표
- 65년 9월 검찰은 윤우현·이형백 사건과 관련 이준구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
 - 이형백은 66년 9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관련자 송택봉·유익재는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
- 이를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는 남파간첩 이문백과 연계된 이형백 등이 적발 되자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 월북 사건을 한데 묶어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장 이준구는 간첩들에 의해 포섭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편, 이준구에게 경향신문 경영권을 포기토록 압박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4) 경향신문 매각과정

당시 경향신문은 한일은행에 2,207만원, 서울은행에 1,470만원, 제일은행에 950만원 등 총 4,627만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었는데, 당시 비슷한 수의 독자층을 가진 중앙 일간지들이 각각 1억 3,700만원·1억 2,600만원·1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경향신문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할 수 있음

- 65년 7월 3일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7월 5일에는 서울은행이 각각 경향신문사로 '대출금상환통지장'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각 은행은 언론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일을 관례적으로 자동 연기해 주었는데 반해
 -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만기일을 불과 2~3일 남겨놓고 상환을 통보한 데 이어
 - 7월 9일부터 법원에 경향신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9월 7일 부동산 경매개시를 결정

- 이준구의 처 홍연수는 66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소공동 부지 매각대금 800만원을 1월 24일 찾으려하자, 중앙정보부는 조총련 연계자금이라며 지불을 정지시켜 경매 응찰을 방해
- 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는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金喆浩)에게 218,074,850원에 낙찰되었음
 - 당시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

라. '강제 매각'에 대한 권력의 개입

1) 강제적인 주식 양도

- 김형욱 등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이준구를 구속시킨 후 홍연수에게 부산일보 김지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자 5.16장학회에 재산을 헌납했던 사례를 들어가며 빨리 신문사를 넘길 것을 종용
 - 그러나 이준구·홍연수 부부는 이준구가 간첩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향신문의 법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66년 1월 25일 이후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
 -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윤우현 사건만으로는 이준구 부부를 굴복시킬 수 없자, 이준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거나 당사자들을 협박하고, 주변인물들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함
- 홍연수에 따르면 신문사 매각에 관한 압력은 주로 김형욱 부장과 이준구의 구속수사를 담당한 부국장 길○○이 주도했다고 증언
 - 특히 길○○은 홍연수에게 경향신문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준구를 사형시킨 후에 정신을 차리겠느냐,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역가고 신문사도 운영 못하고 두 가지 모두를 잃을 것”

이라고 하는 등 협박하다가 이를 녹음당했고, 66년 2월 14일 김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여 경질됨

- 경향신문이 매각된 뒤에도 홍연수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김형욱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서 이렇게 주식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고, 홍연수는 남편을 무죄로 석방해 준다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형욱은 먼저 주식을 넘겨주면 석방해 주겠다고 승강이하여 4개월여를 끌게 되었음
 - 이 기간 기존의 김형욱 부장과 수사국 이외에 서울분실·감찰실 등 중앙정보부 내의 다양한 부서가 동원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음
- 한편 이준구 부부는 국가권력에 맞서 1년 가까이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준구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고립감에 빠져 더 이상 신문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66년 4월 초순경 김형욱에게 주식을 양도
 - 이에 김형욱은 이준구를 다음 공판 기일인 4월 19일에 맞춰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국가보안법·반공법 부분은 무죄로 해주겠지만, 중앙정보부도 체면이 있으니 외환관리법은 선고유예로 하겠다고 했다고 함
 - 이준구는 실제로 이날 벌어진 2심에서 김형욱이 약속한대로 판결을 받고 석방
- 중앙정보부는 경향신문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형백·윤우현 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준구의 여죄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 이준구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금전출납 군인을 살해하고 거액을 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홍연수가 주권을 양도하자 66년 4월 22일 수사를 종결
- 김형욱은 이준구 부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경향신문 경매 낙찰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준구 부부에게 지급
- 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 66년 4월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로 제헌국회의원이자 1950년대에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박찬현(朴贊鉉)

에게 경영을 맡겼고, 주식도 50%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쳤으며, 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주식을 양도하였고

-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자 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李桓儀)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경향신문도 5.16장학회 소유가 됨

2)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 서울분실장 백○○ 등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고
- 홍연수는 김형욱 등이 매각 압력을 가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임을 내세웠다고 했으며 또 김형욱이 “(박 대통령이)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빼앗아 5.16장학회에 다 갔다 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
- 길○○ 부국장의 협박 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김상현 전 의원도 당시 테이프에 길○○이 “내 뜻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
- 당시 중정 직원들도 사건 정황상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중정의 전 부서가 동원되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해 온 점으로 미루어 경향신문 매각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3)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개입

- 65년~66년 당시 자료 및 중정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 · 서울분실 ·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경향신문 매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홍연수는 65년 5월 이준구 구속 이후에는 주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길○○ 부국장이 갖은 협박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66년 2월 녹음협박 폭로로

길○○이 경질된 이후에는 방○○ 감찰실장이 자신과 주변인에게 폭력과 고문·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문사의 매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함

- 금융권에 대한 압력도 현재 중앙정보부의 개입을 증명하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으나, 당사자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출금 회수 압력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이형백 사건과 윤우현 입북 등을 빌미로 이준구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이나 추후 조총련 자금 유입설에 대한 수사(K공작), 그리고 이준구 측의 저항이 장기화 되자 살인협박과 부역죄까지 씌우려했던 여죄 수사 등으로 미루어 중앙정보부가 언론탄압을 위해 공안사건을 확대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

Ⅳ 結論 및 意見

1. 결 론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5.16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 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이 두 사건은 40여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받았고
-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 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섰
- 결국 同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당시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 논조를 지속해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 특히 경향신문 처리 과정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서울분실·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2. 의 견

-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

조치가 필요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 · 부산일보 · 부산문화방송 · 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인 성격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 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 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적 언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강제매각시켰음
- 경향신문은 기아산업에 인수되었다가 69년 소유권이 신진자동차로 이전되었고 74년 문화방송에 통합됨으로써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음
- 당시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언론 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